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안 번호	14102
----------	-------

제안연월일 : 2025. 11. .

제안자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1. 대안의 제안경위

의안명	의안번호	대표발의	발의일	심사경과
어린이 제품 안전 특별법 일부개정 법률안	2204217	장철민의원	2024.09.24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9차 산업통상 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11.20) 상 정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을 거쳐 소위 회부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1차 산업통상 자원특허소위원회(2025.9.9.) 상정, 축 조심사 및 의결(대안반영폐기)
	2206185	박성민의원	2024.12.03	-제422회 국회(임사회) 제1차 산업통상 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2.19.) 상 정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을 거쳐 소위 회부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1차 산업통상 자원특허소위원회(2025.9.9.) 상정, 축 조심사 및 의결(대안반영폐기)
	2207209	박성훈의원	2025.01.02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1차 산업통상 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9.8.) 상 정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을 거쳐 소위 회부
	2209739	장철민의원	2025.04.11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1차 산업통상 자원특허소위원회(2025.9.9.) 상정, 축 조심사 및 의결(대안반영폐기)

가.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1차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2025. 9. 9.)에서 위 4건의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각각의 법률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각 법률안의 내용을 통합·조정하여 우리 위원회의 대안을 마련하기로 함.

나.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2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 9. 25.)에서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가 심사보고한 대로 4건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는 대신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가 마련한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함.

2.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하여금 어린이제품에 대한 안전성조사를 하고, 어린이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등의 제품에 대해서는 수거·파기 또는 제조·유통의 금지 등의 조치를 권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소비자가 자가사용을 목적으로 직접 구매하는 해외어린이제품이 안전성조사 없이 국내에 반입되면서 기준치 이상의 유해물질이 검출되거나 안전사고가 일어나는 등 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됨.

아울러 최근 초등학교에서 사용되는 칠판, 게시판 등 교구에서 다량의 유해물질이 검출되어 사회적 논란이 되었으나, 이러한 교구는 현행 법상 어린이제품에 포함되지 않아 안전관리의 사각지대에 있는 것으

로 나타남.

이에 자가사용을 목적으로 해외 사이버몰에서 직접 구매한 어린이 제품에 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안전성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그 결과에 따라 관세청장에게 해당 제품의 반송·폐기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해외어린이제품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교구 안전기준에 관한 특례 규정을 신설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교구에 관한 안전기준을 정하여 고시하도록 하고, 안전기준에 적합한 교구를 사용하도록 하기 위하여 교육부장관에게 필요한 조치를 하여 줄 것을 요청하도록 함으로써 어린이를 위한 안전한 환경 조성에 기여하려는 것임.

3. 대안의 주요내용

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직접구매 해외어린이제품에 대하여 안전성 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그 결과에 따라 관세청장에게 해당 제품의 반송, 폐기 또는 개선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의2 신설).

나.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직접구매 해외어린이제품 안전성조사 결과를 공표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

다. 직접구매 해외어린이제품의 위해성이 확인된 경우 등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해외통신판매중개자에게 사이버몰에서 해당 제품을 삭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권고하고, 그 사실을 공표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의2 신설).

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교구에 관한 안전기준을 정하여 고시하도록 하고, 안전기준에 적합한 교구를 사용하도록 하기 위하여 교육부장관에게 필요한 조치를 하여 줄 것을 요청하도록 함(안 제14조의2 신설).

마.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직접구매 해외어린이제품 관련 시장감시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직접구매 해외어린이제품 관련 안전정보를 수집·관리하도록 함(안 제27조 및 제28조).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1호의2 및 제2호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직접구매 해외어린이제품”이란 개인이 자가사용을 목적으로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없는 어린이제품의 통신판매중개자(「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에 따른 통신판매중개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운영하는 해외의 사이버몰(같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이버몰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직접 구매하는 어린이제품을 말한다.

2의2. “해외통신판매중개자”란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없는 어린이제품의 통신판매중개자로서 매출액, 이용자 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제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2(직접구매 해외어린이제품의 안전성조사 등)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직접구매 해외어린이제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안전성조사를 할 수 있다. 다만, 「환경보건법」에 따른 환경유해인자의 위해성평가는 제외한다.

1. 직접구매 해외어린이제품으로 인하여 어린이의 생명·신체에 위

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2. 외국에서 위해성을 이유로 사업자 또는 외국의 다른 사업자가 제

12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취한 경우

3. 그 밖에 직접구매 해외어린이제품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
요한 경우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직접구매 해외어린이제품에 대하여 안전성조사를 한 결과 해당 제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세청장에게 해당 제품에 대하여 반송, 폐기 또는 개선조치를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1. 개별 법령에서 정하는 요건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2. 중대한 결함으로 인하여 어린이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직접구매 해외어린이제품에 대한 안전성조사의 내용과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공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직접구매 해외어린이제품의 안전성조사의 방법·절차,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의 조치 등의 세부적인 내용 및 제3항에 따른 직접구매 해외어린이제품 안전성조사의 내용 및 결과 제공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제1항 중 “제6조에 따른 안전성조사 결과”를 “제6조 또는 제6조의2에 따른 안전성조사 결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어린이제품”

을 “어린이제품 또는 직접구매 해외어린이제품”으로 한다.

제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2(직접구매 해외어린이제품 정보 등의 삭제등의 권고 등)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외통신판매중개자에 대하여 그가 운영하는 사이버몰에 게재된 해당 직접구매 해외어린이제품에 관한 정보 등의 삭제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조치(이하 “삭제등”이라 한다)를 권고하고, 그 사실을 공표할 수 있다.

1. 제6조의2에 따른 안전성조사 결과 해당 직접구매 해외어린이제품의 위해성이 확인된 경우
2. 직접구매 해외어린이제품의 제조·설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결함으로 인하여 어린이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권고를 받은 해외통신판매중개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권고를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표할 수 있다.

③ 해외통신판매중개자는 제1항에 따른 권고에 따라 조치를 한 경우 조치의 결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산업통상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삭제등의 권고 및 공표, 제2항에 따른 공표 및 제3항에 따른 보고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제1항 중 “사업자 또는 해당 수거등의 권고 또는 명령에 이해 관계를 가진 사업자”를 “사업자, 해당 수거등의 권고 또는 명령에 이해 관계를 가진 사업자 또는 제9조의2제1항에 따라 삭제등을 권고받은 해외통신판매중개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제9조에 따른 권고”를 “제9조 또는 제9조의2에 따른 권고”로 한다.

제2장제1절에 제1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의2(교구 안전기준에 관한 특례)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의 유치원과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 등에서 만 13세 이하의 어린이가 사용하거나, 어린이를 위하여 사용되는 칠판, 게시판 등(이하 이 조에서 “교구”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할 안전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에 따라 안전관리되고 있는 어린이제품은 제외한다.

② 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유치원 또는 초등학교 등에서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교구의 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안전기준에 적합한 교구를 제조·유통하여야 한다.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유치원 또는 초등학교 등에서 안전기준에 적합한 교구를 사용하도록 하기 위하여 교육부장관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부장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1. 제1항에 따른 교구가 학교 등에 설치되기 전 해당 교구가 안전기준에 적합한지 여부의 확인

2. 제1항에 따른 교구가 안전기준을 만족하도록 하기 위한 유지·관리

3. 그 밖에 제1항에 따른 교구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④ 제1항에 따른 교구의 종류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한다.

제27조의 제목 및 제1항 중 “어린이제품”을 각각 “어린이제품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어린이제품안전관리에”를 “어린이제품 및 직접구매 해외어린이제품(이하 이 절에서 “어린이제품등”이라 한다) 안전관리에”로, “어린이제품 안전에”를 “어린이제품등 안전에”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어린이제품”을 “어린이제품등”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어린이제품으로”를 “어린이제품등으로”로 한다.

제28조제1항 중 “어린이제품”을 “어린이제품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어린이제품”을 “어린이제품등”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 략) <u><신 설></u>	제2조(정의) ----- -----. 1. (현행과 같음) <u>1의2. “직접구매 해외어린이제품”이란 개인이 자가사용을 목적으로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없는 어린이제품의 통신판매중개자(「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에 따른 통신판매중개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운영하는 해외의 사이버몰(같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이버몰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직접 구매하는 어린이제품을 말한다.</u>
2. (생 략) <u><신 설></u>	2. (현행과 같음) <u>2의2. “해외통신판매중개자”란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없는 어린이제품의 통신판매중개자로서 매출액, 이용자 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u>

3. ~ 13. (생략)

<신설>

다.

3. ~ 13. (현행과 같음)

제6조의2(직접구매 해외어린이제품의 안전성조사 등)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직접구매 해외어린이제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안전성조사를 할 수 있다. 다만, 「환경보건법」에 따른 환경유해인자의 위해성평가는 제외한다.

1. 직접구매 해외어린이제품으로 인하여 어린이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2. 외국에서 위해성을 이유로 사업자 또는 외국의 다른 사업자가 제12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취한 경우

3. 그 밖에 직접구매 해외어린이제품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직접구매 해외어린이제품에 대하여 안전성조사를 한 결과 해당 제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세청장에게 해당 제품에 대하여 반송, 폐기 또는 개선조치를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1. 개별 법령에서 정하는 요건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2. 중대한 결함으로 인하여 어린이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직접구매 해외어린이제품에 대한 안전성조사의 내용과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공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직접구매 해외어린이제품의 안전성조사의 방법·절차,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의 조치 등의 세부적인 내용 및 제3항에 따른 직접구매 해외어린이제품 안전성조사의 내용 및 결과 제공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안전성조사 결과 등에 관

제8조(안전성조사 결과 등에 관

한 공표)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6조에 따른 안전성조사 결과에 관한 사항을 공표할 수 있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의 장은 어린이제품의 위해 여부가 의심되는 경우로서 그 사실을 공표하려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미리 알려야 한다.

③ (생략)

<신설>

한 공표) ① -----
-----제6조 또는 제6조의2에 따른 안전성조사 결과-----
-----.

② -----

-----어린이제품
-----또는 직접구매 해외어린이제품

-----.

③ (현행과 같음)

제9조의2(직접구매 해외어린이제품 정보 등의 삭제등의 권고 등)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외통신판매중개자에 대하여 그가 운영하는 사이버몰에 게재된 해당 직접구매 해외어린이제품에 관한 정보 등의 삭제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조치(이하 “삭제등”이라 한다)를 권고하고, 그 사실을 공

표할 수 있다.

1. 제6조의2에 따른 안전성조사 결과 해당 직접구매 해외어린이제품의 위해성이 확인된 경우

2. 직접구매 해외어린이제품의 제조·설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결함으로 인하여 어린이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권고를 받은 해외통신판매중개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권고를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표할 수 있다.

③ 해외통신판매중개자는 제1항에 따른 권고에 따라 조치를 한 경우 조치의 결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산업통상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삭제등의 권고 및 공표, 제2항에 따른 공표

제11조(권고 등의 해제 신청 등)

① 제9조에 따라 수거등을 권고 받거나 제10조에 따라 수거등을 명령받은 사업자 또는 해당 수거등의 권고 또는 명령에 이해관계를 가진 사업자가 권고나 명령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그 권고나 명령이 있음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권고나 명령의 전부 또는 일부 해제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에 대하여 30일 이내에 제9조에 따른 권고 또는 제10조에 따른 명령의 전부 또는 일부의 해제 여부를 결정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기간 내에 결정을 할 수 없을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및 제3항에 따른 보고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권고 등의 해제 신청 등)

① -----

-----사업자, 해당 수거등의 권고 또는 명령에 이해관계를 가진 사업자 또는 제9조의2제1항에 따라 삭제등을 권고받은 해외통신판매중개자-----

-----.

② -----

-----제9조 또는 제9조의2에 따른 권고-----

-----.

있다.

③ · ④ (생 략)

<신 설>

-----.

③ · ④ (현행과 같음)

제14조의2(교구 안전기준에 관한

특례)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의

유치원과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 등에서

만 13세 이하의 어린이가 사용

하거나, 어린이를 위하여 사용

되는 칠판, 게시판 등(이하 이

조에서 “교구”라 한다)에 대하

여 적용할 안전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어린

이제품 안전 특별법」에 따라

안전관리되고 있는 어린이제품

은 제외한다.

② 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유

치원 또는 초등학교 등에서 어

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교구의

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안전기

준에 적합한 교구를 제조·유통

하여야 한다.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유치원 또는 초등학교 등

에서 안전기준에 적합한 교구

를 사용하도록 하기 위하여 교

제27조(어린이제품 관련 시장감시업무의 수행과 안전정보의 제공요청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어린이제품 안전사고와 관련이 있는 제품의 조사·감정 등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시험·분석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행하여야 한다.

육부장관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부장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1. 제1항에 따른 교구가 학교 등에 설치되기 전 해당 교구가 안전기준에 적합한지 여부의 확인

2. 제1항에 따른 교구가 안전기준을 만족하도록 하기 위한 유지·관리

3. 그 밖에 제1항에 따른 교구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④ 제1항에 따른 교구의 종류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한다.

제27조(어린이제품등 관련 시장감시업무의 수행과 안전정보의 제공요청 등) ① -----
-----어린이제품 및 직접 구매 해외어린이제품(이하 이 절에서 “어린이제품등”이라 한다)-----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품안전기본법」 제16조에 따른 제품안전정보망을 활용하여 어린이제품과 관련된 각종 사고

① -----

어린이제품등-----

정보 등을 체계적으로 수집· 관리하여야 한다.	----- -----.
② <u>어린이제품</u> 안전정보의 수 집·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② <u>어린이제품등</u> ----- ----- -----.